



국립보건원 확대...질병관리본부 출범

검역과 방역기능의 일원화, 방역기능의 전문화

국립보건원이 확대 개편된 질병관리본부(KCDC)가 공식 출범했다.

질병관리본부는 19일 고건(高建) 국무총리와 김화중(金花中) 보건복지부장관, 김문식(金文澁) 질병관리본부장, 보건의료단체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헌판식을 가졌다.

질병관리본부는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에이즈, 홍역, 말라리아 등 신종 전염병과 재출현하는 전염병 관리에 필요한 국가 방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연구소, 6부(部), 10과(課), 13과(科), 5실(室), 13검역소 체제로 구성됐다.

특히 방역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생물테러대응과, 만성병조사과, 검역관리과, 에이즈·결핵관리과, 예방접종관리과 등이 신설됐고 질병관련 시험 및 연구기능을 전문화하기 위해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본부 소속 기관으로 뒀다.

또 전국 13개 국립검역소를 질병관리본부 소속으로 이관함으로써 신종 전염병 및 해외 전염병에 대한 검역과 방역기능을 일원화했다.

국립보건원이 질병관리본부로 확대 개편됨으로써 전체 인원도 기존 175명에서 481명으로 늘었다.

김문식 질병관리본부장은 "검역과 방역기능의 일원화, 방역기능의 전문화, 체계적인 만성병 조사 연구사업 등이 가능해졌다"며 "열대풍토질환과 등이 신설됨으로써 해외 각종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기능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2004. 1. 19)

금연보조제, 유해성분 표시 의무화

담배 형태의 금연보조제에 타르 등 유해성분과 함량을 함께 표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사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담배 형태의 금연보조제에 타르 등 유해성분과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담배 및 담배 대용품에 대해서는 타르와 니코틴 함량시험을 실시한 뒤 함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돼 있지만 담배 형태의 금연보조제에는 의무 규정이 없다.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금연보조제를 이용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유해성분 함량 표시를 의무화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2004. 1. 6)

동물 바이러스, 인간건강 위협 할 것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조류독감 등 동물 바이러스들이 앞으로 인간건강의 최대 위협이 될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13일 경고했다.

과학자들은 이날 영국 런던 왕립학회에서 열린 학술 회의에서 이 동물 바이러스들은 그 정체가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욱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바이러스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급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영국의BBC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1970년대 이후 나타나 인간을 감염시키고 있는 에이즈, 사스, 조류독감 등 35종에 이르는 새로운 바이러스들은 모두 동물에서 나온 바이러스들이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중국 광저우(廣州)에 있는 호흡기질환연구소의 난 산종 박사는 사스바이러스가 종(種)을 뛰어넘어 동물로부터 사람의 몸에 침투했다는 증거가 점점 확실해지고 있다고 말하고, 일단 사향고양이가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다른 동물들도 관련되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난 박사는 사스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잠복하면서 수시로 인간을 괴롭힐 것으로 전망하면서 조기진단과 치료만이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홍콩대학 미생물학교수인 말리크 페이리스 박사는 베트남에서 3명의 주인이 조류독감으로 사망한 것은 우려되는 사태가 아닐 수 없다면서 많은 과학자들이 예고하듯이 동물 바이러스가 뒤섞인 신종 독감 바이러스가 전세계를 재앙 속에 몰아넣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호주 국립대학의 토니 맥마이클 박사는 사스, 조류독

감, 에이즈 바이러스는 모두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전염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고 “이 바이러스들은 지금 진화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따라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맥마이클 박사는 동물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진 것은 인간이 부락을 이루어 살기 시작한 수천년부터이며 약 2 천년 전 사람들이 더 넓은 도시에 몰려 살면서 이 바이러스들이 뒤섞이기 시작했다고 밝히고 결국 인간의 생활 방식 변화가 이 바이러스들에 진화하고 확산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간의 생활패턴이 바뀔 때마다 인간의 생태계는 동물 바이러스들이 인간의 몸에 침투할 기회를 주었으며 따라서 지금 사스와 에이즈바이러스가 인간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결코 놀라운 얘기가 아니라고 맥마이클 박사는 덧붙였다.

(조선일보 2004. 1. 14)

“저타르 담배 폐암 줄이지 못해”

저타르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폐암의 위험성을 줄이지 못한다고 영국 의학저널 최신호가 7일 밝혔다.

이 저널은 7mg 이하의 초저타르 담배나 8~14mg의 저타르 담배를 피우는 남녀흡연자들의 폐암발병 위험도가 15~21mg의 중타르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과 구분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제프리 해리스 박사와 미국암학회의 마이클 톤 박사의 연구결과 22mg 이상의 타르를 함유한 필터가 없는 시가를 피우는 흡연자에게는 좀 더 높은 폐암발병 위험성이 발견됐다.

연구진들은 30세 이상의 폐암 사망자들과 이들의 타르 함유량별 담배 흡연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이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연합뉴스 2004. 1. 8)

부모 소득따라 보육료 달라진다

올부터 어린이집 등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보육료를 4등급으로 다르게 내게 된다. 또 빠르면 내년부터 보육시설 설치가 현재의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바뀐다. 하지만 보육기관이 보육료 외에 필요경비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잡부금 시비 및 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

이는 지난 8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달라지게 되는 내용들이다.

◆ **보육은 국가의 책임** =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보육의 책임을 국가가 지도록 한 것. 개정 전에는 보호자가 보육에 대해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개정안은 보육시설의 설치 및 보육교사의 인건비, 운영비 등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만 5세아 및 장애아에 대한 무상 보육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또 올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의 경우 국가가 보육료를 전액 부담한다.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 위의 소득을 갖는 저소득계층)은 일반 보육료의 40%를, 차차상위 계층(도시 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의 50% 미만을 갖는 계층)은 보육료의 60%만 내면 된다. 나머지 보육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된다.

◆ **시설 설치는 인가제로** = 보육시설을 새롭게 설립할 때는 설치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게 됐다. 이제까지는 신고만 하면 됐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도입된다. 세밀한 평가 기준에 따라 ABC 등으로 등급을 매김으로써 시설의 질적수준을 높이고 보육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보육교사의 국가자격증 제도도 실시된다. 이제까지는 일정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보육교사로 활동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등에서 납부금을 걷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일부 보육시설에서 특기 적성교육 등을 병행하면서 별도의 비용을 받아 문제가 됐던 부분을 합법화 시킨 꼴이다. 이에 따라 부모 부담이 늘어날 뿐 아니라 본래 기능보다 특기적성 교육이 중심이 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될 위험이 있다.

(중앙일보 2004. 1. 13) 